

“새만금, 생태문명 전환의 중추”

송하진 도지사, 수변도시 착공·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에 기대감 표출 “도민·전북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삶의 양태 바꾸는 중심이 될 것” 강조

“사람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새만금이 생태문명 전환의 전기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과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함께 열린 지난 1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의 변화가 도민과 전북의 발전 뿐 아니라 생태문명으로 삶의 양태를 바꾸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의 첫 도시를 향해 첫 삼을 뜬 ‘수변도시’에 대해 송 지사는

“새만금의 한 가운데 들어서는 이 도시는 자연과 사람, 기술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삶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스마트 수변도시는 미래도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수변도시가 있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이 새만금의 성공이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며, 윤곽을 드러낸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대해 송 지사는 “탄소를 줄

이고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는 데 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전력을 활용해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를 준비해 온 곳이다”며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다가서는 중이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스마트 그린산단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전 세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끌 날을 기대



한다”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이자 탄소중립 실현 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 조성

‘이제는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서 급증하는 한-중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유치 배후물류거점 조성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군산항에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를 조성해 비대면 경제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 (통권 236호)를 발간,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도의 유일한 수출입관문인 군산항이 한-중 구간의 해상전자상거래 화물유치에 전략적 입지 강점이 있는 점을 활용, 민간통관업체 유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평택에서 운영 중인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처리물류량이 급증하고 있고, 주요 물류기업이 수도권 지역 대형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추세에 대응해 군산항을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특구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위성과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화물의 중요성, 긴급성을 고려해 대부분 항공물류를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 산동성 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적일수송이 가능한 16개의 한중 해상카페리(cargo-ferry)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카페리수송구간은 항공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성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유치할 경우, 비수도권 택배 물류거점(대전, 육천)과 거리상 인접성, 통관 신속성의 강점을 부각해 일반적으로 7~8일 소요되는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을 3~4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물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군산항 배후에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조성해 연간 5,000TEU의 화물을 처리할 경우, 304억 원 가량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일한 전북도 지역 선사인 석도국제해리(주)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책임인 나정호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민간특송업체의 자가통관장 운영규칙을 적용해 급증하는 해상전자상거래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거점으로 전북도와 군산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이 협력해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정호 박사는 특히, “코로나19로 신규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특송업체를 유치해 비수도권 해상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도’, ‘군산시’, ‘관세청(군산세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등 관계기관이 주도한 민간업체, 연구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 해상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이 조성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해외판로개척,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식품수출 지원, 전북도 특산물 중국 수출연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북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군산항,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신규전략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고창군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18일부터 이날 18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상임위원회를 통한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3.1% 증가한 7,1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930억원, 특별회계는 201억원이고, 2021년도 기금은 135억원이며,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7,53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2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3억원으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0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이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기동안에 군정질문·답변도 진행했다.

임정호 의원은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높을고창 통합브랜드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김미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재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윤리심사 결과 발표

고창군의회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의원 윤리심사 요건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18일에 발표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3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의원 윤리심사 요건의 건이 회부됨에 따라 합리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심사했다.

윤리특위(위원장 김영호)는 발의된 최인규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 결과, 윤리강령(부정청탁, 성희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윤리강령 위반 사실 없음’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는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위원, 대전·충남·경북 광역협력 담당 부서장,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북도 자치분권 포럼’을 지난 18일 열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자치분권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는’

전북도 자치분권 포럼... 시·도간 초광역 협력 방안 논의

전북도는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위원, 대전·충남·경북 광역협력 담당 부서장,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북도 자치분권 포럼’을 지난 18일 개최하고, ‘2020년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시·도간 초광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추진했던 자치분권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타 시·도 광역협력 담당 부서장들과 초광역 행정통합 트렌드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진현 박사는 “2020년 자치분권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

해를 높였다.

또한,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는 ‘초광역 행정통합 트렌드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 방안’을 발제, 타 시·도 광역협력 담당 부서장들과 광역협력 방안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정진현 박사는 “자치분권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이다”며 “도래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별 자치단체들의 창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재 박사는 “수도권 율령현상,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광역시·도 간 연계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생태금융, 백제문화 등을 활용한 충청권과 연계, 최근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 ‘동서 내륙벨트 조성 사업’을 통한 대경권과의 연계 등을 통한 초광역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신기현 교수를 좌장으로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위원, 전북·대전·충남·경북 광역 협력 부서장들이 새롭게 변화한 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방안과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최 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화하는 지방분권의 흐름을 반영한 전북도 자치분권 실행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초광역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혁신협의회 2기 위원, 전북형 뉴딜 위한 전문가로

전북도, 협의회 출범식... 전북대 설경원 교수, 회장으로 선출돼

전북도는 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에 따른 ‘전북지역혁신협의회 출범식’을 지난 18일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중앙부처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의 민관 협의체로 시·도의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지역산업 혁신성장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기타 균형 발전 정책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북도 위원회이다.

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구성됨에 따

라, 출범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관련 심의위원 1명과 민간 전문가 18명을 위촉직으로 하는 임기 2년의 민관 거버넌스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북도 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혁신성장계획 심의, 의견, 자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심의·의결·자문, 기타 국가공모사업 심의 등이 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1기 때와는 달리 D.N(Digital Network, AI) 생태계, 스마트 의료·돌봄, 중소기업 원격근무 등으로 대변되는 ‘전북 디지털 뉴딜

과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으로 대변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중원했다.

2기 지역혁신협의회는 전북대학교 설경원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설경원 교수는 “2기 지역혁신협의회를 야심 차게 이끌어서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와 전북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기 협의회는 전북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목소리를 크게 내기로 의기투합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해 전북형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산업분야에 많은 지혜를 모아보고자 입을 모았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형건설사 산재 사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공공기관 비경규격의 정규직화 전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

이울러, 환경분야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불법폐기물 무단방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성실한 정책활동으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 브랜드 ‘왕의 도시’로 하자”

김현덕 시의원, 5분 발언서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재정립을 위해 도시브랜드 명칭을 경쟁력 있는 ‘왕의 도시 전주’로 정하고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1·2·3동)은 지난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태조 이성계와 전주이씨의 근원을 살려 천년 고도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키워드로 도시 브랜드 명칭을 ‘왕의 도시 전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우리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에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 줄 필요가 있다”며 “왕의 도시 전주는 매우 경쟁력 있고 독창성 있는 브랜드로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문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왕의 도시 전주가 이미 전주시가 사용 중인 ‘한(韓)스타일’이나 ‘꽃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이미지여서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성 기자



김 의원은 또 전주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전주문화 특별시 지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경우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며 문화정책을 담고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례 제정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